

---

# 개방형직위 안내자료

(법무담당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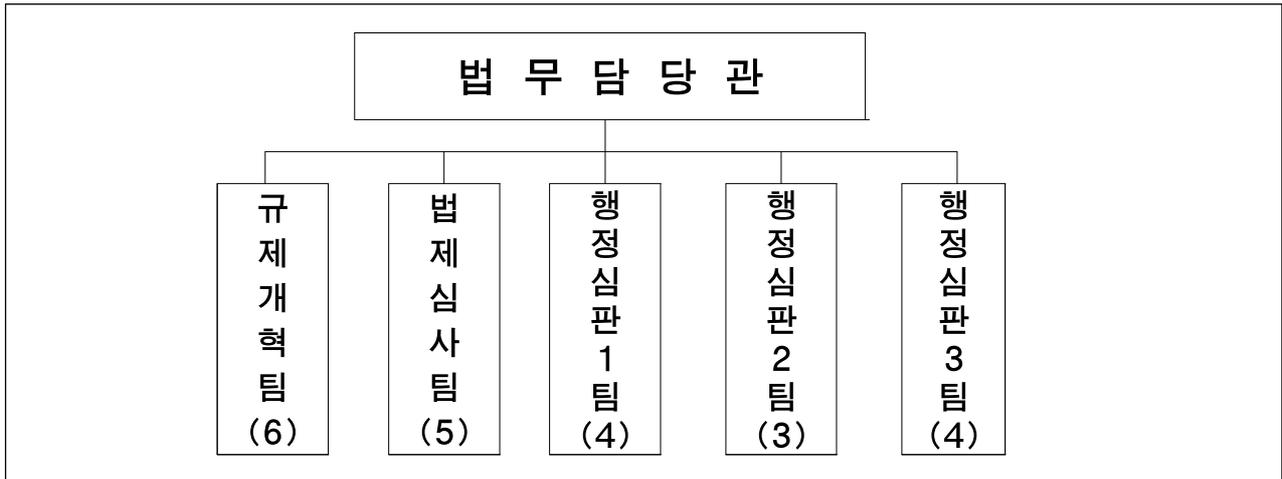
---

2022. 5.

서울특별시

# I. 기관 일반현황

## □ 조직: 5개팀



## □ 인력: 정원 26명 / 현원 22명

(2022.5. 현재)

| 구분              | 직급     | 정원 | 현원 | 과·결원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|------|----|
| 합계              |        | 26 | 22 | △4   |    |
| 일반직<br>(임기제 제외) | 소계     | 22 | 20 | △2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행정 5급  | 6  | 5  | △1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행정 6급  | 10 | 6  | △4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세무 6급  | 1  | 1  | -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행정 7급  | 5  | 7  | 2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행정 8급  | -  | 1  | 1    |    |
| 임기제             | 소계     | 3  | 1  | △2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임기제 4급 | 1  | -  | △1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임기제 6급 | 2  | 1  | △1   |    |
| 관리운영직           | 소계     | 1  | 1  | -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6급     | -  | 1  | 1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8급     | 1  | -  | △1   |    |

## □ 예산: 696백만원

| 연번 | 사업명               | 예산액(백만원)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| 계                 | 696      |
| 1  |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       | 299      |
| 2  |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      | 276      |
| 3  |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| 72       |
| 4  | 기본경비              | 49       |

## Ⅱ. 법무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

- **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 및 법령·제도 개선 등 관리**
  - 국무·차관회의 상정안건 검토 및 시장, 행정1부시장 보고
  - 법령·제도개선 건의 및 법령 제·개정안 의견조회 등 국가입법 관리
- **규제개혁 업무 추진**
  - 정부 지방규제개혁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건의
  - 자치법규 제·개정 시 신설·강화 규제 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
- **자치법규 입안심사**
  - 시 조례·규칙안 입안심사 및 중요문서 심사
  -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 공포
  - 자치구 조례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(재의요구 여부 등)
- **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**
  - 시 소속 행정청 및 자치구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
  - 시·자치구 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소청사건 검토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
  - 시(본청)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 총괄 관리
- **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**
  - 세무행정 고충민원 처리,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

# Ⅲ. 법무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

## 1.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

### □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규제개혁 추진

- 신산업 육성 등 우리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
- 소관부처 외에 국회, 국무조정실 등과도 협조하여 신속한 개선 추진
- 자치법규 상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등록규제 정비 시행

## 2.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

### □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가

- 사건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처리 지연 사유 파악을 통한 안전 신속 처리
- 고난도 사건 처리 및 심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주심배정 비율 확대
- 사회·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추진